

원산지 판정기준변화와 수입선 다변화제도 해제가 국내광학산업에 미칠 파고를 집중 점검한다.

취재 : 연정희 기자

통상산업부는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해온 수입선 다변화제도를 개선, 오는 7월 1일 부터는 제3국 일본 브랜드 반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일본 이외의 제3국에서 조립, 생산한 일본 브랜드 제품의 경우 부가가치 기준과 주요 부품 판정 방식으로 수입을 재제한 것을 핵심부품의 원산지와 부품 채용비율을 확인 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통산부는 이를 위해 대외 무역관리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 고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카메라, 미니랩, 복사기를 비롯한 광학제품 등 종전의 34개 수입선 다변화 지정품목의 경우 일본 이외의 제3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국내 반입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통산부는 금번 이와 같은 방침이 발표된 배경에 대해 '일본 이외의 주요 무역대상국들이 일본 부품을 사용해 만든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기에 수입선 다변화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다 한국의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의 가입을 앞둔 시점에서 일본 이외의 국가들이 이의를 제기해 올 경우 국제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 등 변화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백58개에 달하던 수입선 다변화 품목을 '94년부터 해제하기 시작, 현재 1백62개를 줄여놓은 상태이며, 또한 오는 7월에 추가해제 계획과 함께 늦어도 2천년까지는 수입선 다변화 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또 다른 개방파고를 불러일으킬 원산지 판정기준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수입선 다변화제는 사실상 7월부터 폐지,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원산지 판정기준 개정 및 시행' 과 관련한 정부의 금번 발표는 카메라, 즉석 컬러사진 현상인화기(이하 현상기라 칭함), 복사기를 비롯한 광학 관련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음은 물론 해당업계의 제품 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지에서는 정부의 원산지 판정기준 개정 및 수입선 다변화 제도의 조기해제와 관련, 광학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문제점을 중점 점검해 보았다.

-편집자 주-

광학기술은 첨단기술산업으로 기계 및 전자산업분야에서 그 응용범위 및 파급효과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광전자, 광정보, 광통신분야의 광학관련 제품들이 선진국을 위주로 고 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 세계시장으로 주도하고 있다.

한편, 국내 광학시장은 카메라, 복사기, 현상기, 쌍안경, 현미경, 렌즈 등 전통적인 광학기 기 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카메라, 복사기, 현상기 등은 80년대 초반, 정부의 수입선 다변화 지정과 이에 부응한 관련업계의 활발한 투자와 연구개발로 점차적인 경쟁력 확보 및 생산규모 증가로 수출 산업화로의 전환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 국산 광학제품은 선진국과의 기술 및 품질측면에서는 근접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 등 경쟁국과 비교해 볼 때 가격경쟁력 면에서는 다소 열세를 보이고 있다.

“

정부에서는 '80년대 후반 카메라, 복사기, 현상기 등 주요 광학제품을 비롯한 전자, 기계 등 다양한 국내 제품을 수입선 다변화 품목으로 지정,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국내 산업을 육성시켜 왔다.

”

특히 단순조립이나 연마, 가공 등 노동집약적 기술특성이 강한 중소기업의 부품산업은 경쟁국에 밀리고 있으며 광정보, 광통신분야는 아직 기술개발 및 투자 단계에 있고 또한 광 계측, 제어 및 의료기기분야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레이저 및 응용기기는 국산화 개발 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상의 여러 광학제품들 중 카메라, 복사기, 현상기 등 전통적인 광학기 기 제품이 현재 국내 광학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와 타 산업에 미치는 기술파급효과는 실로 크다고

볼 수 있다. 광 기술, 전자, 물리, 기계기술의 결정체로 기술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이들 아이템은 광응용 기초기술의 핵심적인 요체로 반도체 장비, 의료기기, 사무기기, 감시장치, 광응용 장치 등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80년대 후반, 카메라, 복사기, 현상기 등 주요 광학제품을 비롯한 전자, 기계 등 다양한 국내 제품을 수입다변화 품목으로 지정,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국내 산업을 육성시켜 왔다.

국내 카메라 산업은 '80년대 후반,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입선 다변화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세계 카메라 시장의 90%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일본 카메라업계의 한국 진출을 차단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기회를 활용, 장기적인 플랜 하에 활발한 투자와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표 1) 국내 카메라업계의 카메라 기술 개발 성과

(단위 : 억원)

구 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R&D투자금액	49	77	92	182	247
매출액 대비%	7	11	9	12	13
주요 기술 개발 내용	3배줌 개발	줌서터 개발	소형 고배율 줌 카메라 개발	세계 최초 4배줌 개발	APS카메라 개발

*자료 : 삼성항공산업(주)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과거 일본 카메라업체들의 전제로 카메라기술 뿐만 아니라 생산기술의 이전도 극히 어려웠으나 수입선 다변화 지정 이후 국내 카메라 업체들은 일본업체와의 기술제휴를 통한 산업기반을 다진 후, 꾸준한 연구개발비의 투자로 '90년대 이후부터는 독자모형을 개발 출시했으며 '94년 부터는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개발 투자는 5~6년 후에야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동안 3배줌, 일부 줌 셔터, 소형 고배율 줌카메라 개발은 물론 세계 최초로 4배줌 카메라 개발과 함께 조만간 선보이게 될 APS(신 사진 시스템) 및 디지털 스틸 카메라 출시를 앞두고 있는 국내 카메라 업체는 그동안 기초 기반기술이 전무한 국내 광학산업계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투자와 함께 국내 5백 여개의 카메라 부품업체에 대한 꾸준한 기술지도와 협력업체 기술 지원 강화를 통해 보급기, 중급기, 중기능의 카메라 일부를 국산화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 카메라업체들은 셔터, 비구면 렌즈 등의 핵심 부품을

“

아직도 국내 카메라업체들은 셔터 비구면렌즈 등의 핵심부품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쓰고 있어 일본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절대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

”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쓰고 있어 일본 제품과의 가격경쟁면에서는 절대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카메라업체들은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 국산카메라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98년 말까지 셔터를 비롯한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완료한다'는 계획 하에 막대한 개발비를 투자, 현재 부품 국산화 개발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현상기 역시 80년대 초반부터 부품 국산화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55% 정도의 국산화 개발과 함께 핵심 기술 및 부품을 아직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일본과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에 있어서는 격차가 심한 실정이다. 국내 CK 산업과 삼성항공산업(주) 등을 중심으로 한 현상기 독자 모델 개발로 현재 관련 기업의 자구 노력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

점에 수입선 다변화제도 해제 및 원산지 판정 기준 개정을 통한 유통시장 개방을 허용할 경우, 이들 현상기업계의 현재까지의 국산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있는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독자 모델 개발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현상기 생산업체 7개사 중 4개사가 중소기업이며 이들 기업이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독자적으로 제품 개발에 주력, 어느 정도의 자립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 수입선 다변화 해제와 원산지 판정기준이 개정, 유통시장이 개방된다면, 이들 중소기업 현상기업체들은 즉시 경영난에 직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들 국내 현상기 업체는 향후 5~6년 정도의 수입선 다변화 해제시기를 늦춰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상기 도입모델들의 핵심 부품 국산화가 마무리되고 국내 독자모델 개발도 가능케 되어 품질 및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한편, 복사기업계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복사기

〈표 2〉 일본의 메이커별 카메라 해외 생산기지 현황

업체명	국가(설립년도)	생산 현황		해외 생산비율	일본부품 사용비율
		품 목	생산능력		
캐논	중국(1990)	저가 콤팩트	년 55만대	80%	50~60%
	대만(1970)	중가 콤팩트	년 75만대		
	말레이시아(1985)	중저가 콤팩트	년 150만대		
미놀타	말레이시아(1973)	중가 콤팩트	년 170만대	80%	"
		SLR	년 12만대		
		저가 콤팩트	년 24만대		
펜탁스	홍콩(1973)	중저가 콤팩트	년 40만대	70%	"
	중국	Manual SLR	년 15만대		
	대만(1975)	교환렌즈			
	필리핀(1991)	렌즈, ZOOM, 콤팩트			
올림푸스	홍콩(1988)	플래시 및 부품		70%	"
	중국(1990)	중저가 콤팩트	년 100만대		
니콘	태국(1991)	L/S, 콤팩트 SLR	년 18만대	50%	"
리코	대만(1965)	SLR, 콤팩트	년 10만대	80%	"
	중국(1991)	중저가 콤팩트	년 20만대		
교세라	홍콩(1967)	중저가 콤팩트, SLR	년 90만대	80%	"
	브라질	중저가 콤팩트	년 30만대		
	중국	저가 콤팩트	년 25만대		
후지	인도네시아	콤팩트		100%	"
코니카	대만	콤팩트			"

※자료 : 삼성항공산업(주)

메이커는 일본과 자본 합작, 기술 도입 관계를 맺고 그동안 핵심부품 국산화에 주력, '94년도에는 1백억원 투자로 OPC 드럼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으며, 또한 국내 독자모델 및 OEM 방식으로의 수출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의 복사기업계는 일본의 대형 선진 메이커에 비해 생산 및 기술 개발

력이 열악한 상태에 있고 또한 내수시장 규모가 한정된 관계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절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수입선 다변화제 조기 해제와 원산지 판정 기준이 개정될 경우 국내 대부분의 복사기메이커들은 지금까지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한 노력들에 대한 결실을 맺는 방향보다는 완제품 수입

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복사기업계 역시 카메라, 미니랩과 마찬가지로 수입선 다변화제 해제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원산지 판정기준을 종전대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원산지 판정기준을 개

정,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최근 발표는 '2백6개에 해당하는 수입선 다변화 품목을 오는 '99년까지 완전히 없애겠다'는 연초의 계획을 철회, '수입선 다변화 제도 자체를 사실상 훨씬 앞당겨 폐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마련중인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특정국가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 진데다, 다변화 품목제도가 대일 무역 역조를 빨리 개선한다는 당초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데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점을 관련 업계

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산지 판정기준 개정은 사실상 수입선 다변화제도를 푸는 것과 다름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게 카메라를 비롯한 국내 광학업계의 견해다.

그 이유는 일본의 경우 카메라를 비롯한 전자제품의 생산기지를 태국,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지역으로 이미 70~80%를 이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현재 이들 동남아 지역의 값싼 노동력과 일본기업의 선진 기술진을 파견, 저가의 카메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원산지 판정기준을 개정 및 시행할 경우, 저가의 동남아산 일본 카메라 제품이 대량으로 국내에 유입, 국내시장은 조만간 무력화 내지는 붕괴가 가능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현재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일본산 카메라의 가격 경쟁력은 재료비에서 국산제품의 85% 수준, 그리고 간접세 등 종합적인 가격경쟁력은 70~8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국내 소비자들의 일본산 카메라 선호도는 약 8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의 유통시장 개방이라 할 수 있는 원산지 판정기준이 개

〈표 3〉 일본 카메라 업계의 카메라 해외 생산현황

(단위 : 천대, %)

구 분	'94년 말(실적)						'95년 말(추정)					
	총 생산량		일본지역		동남아 지역		총 생산량		일본지역		동남아 지역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중저가	24,074	100	10,534	44	13,540	56	25,300	100	6,930	27	18,370	73
고 가	2,096	100	1,246	60	850	40	2,200	100	1,320	60	880	40
계	26,170	100	11,780	45	14,390	55	27,500	100	8,250	30	19,250	70

*자료 : 일본 야노 연구소

〈표 4〉 동남아산 일본 카메라와 국산제품의 가격 비교

(단위 : 천원)

품 목	규 격	국산 제품	동남아산 일본카메라	국산대비 비율
카메라	3×, 4× ZOOM	300	210	70%

*자료 : 삼성항공산업(주)

정될 경우, 일본 기업들은 일제 선호도가 높은 국내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가격파괴로 인한 국내 유통시장을 단시일 내에 잠식해 나갈 것으로 관련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한편, 사실상의 유통시장 개방이라 할 수 있는 원산지 판정 기준 개정이나 수입선 다변화 제도의 조기 해제는 결과적으로 국내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다같이 불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국산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대일 무역수지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관련업계는 밝혔다.

정부의 수입선 다변화 해제 및 원산지 판정 기준 개정시 기업차원에서는 일본에서의 핵심 부품 공급 중단과 일본의 대한 기술 이전 기피로 제품 자체의 생산 차질 및 시장상실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나아가 세트 메이커의 부품 공급업체인 중소기업의 도산을 속출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높은 가격과 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다 줄 것으로 관련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즉,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해제와 원산지 판정기준 개정으로 인한 유통시장 개방은 단기적으로는 가격파괴로 인해 소비자들은 값싸

고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업체가 국내 광학산업을 독점하게 되어 국내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대에서 제품 구입은 물론 애프터서비스를 받는데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다'는게 국내 광학업계 관계자들의 전반적 견해다.

또한 국내 카메라 업계에서는 '국산카메라 개발이 완료되지 않고 경쟁력이 취약한 단계에서 일본제품에 대한 유통시장 개방시 SLR 카메라를 비롯한 콤팩트 카메라의 경쟁력 약화로 국내 업체의 자립기반이 상실되어 사실상 카메라를 비롯한 광전자 및 광응용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국내 카메라 메이커들은 국산 카메라의 수입선다변화 품목 해제 및 원산지 판정기준 개정을 통한 사실상의 유통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 카메라 산업은 물론 광응용 기초기술의 일시 붕괴를 방지하고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향후 최소 2~3년간 수입선 다변화 해제 일정 연기와 함께 원산지 판정 기준을 현행대로 부가가치 기준과 주요 부품 판정 방식으로 유지시켜 줄 것'을 정부 관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선 다변화 품목 해제와 원산지 판정기준 개정을 통한 유통시장이 개방되면 카메라, 미니랩, 복사기 등 일산 광학제품이 국내로 유입,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가격 인하도 기대할 수 있을 뿐더러 국내 업계의 경쟁력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관련 분야의 국내 산업이 송두리째 흔들려 오히려 한국의 대일 무역역조 개선과 선진국 조기진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정부 관련당국은 주목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도 중요하지만,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 정부 관련당국은 품목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당 업계와 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등 보다 열린 자세로 품목 선정과 해제 시기를 결정하는 접근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리라 본다. 선불리 삼페인을 터뜨려 국내 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경우, 한국의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은 화중지병(畫中之餅)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